

현안과제연구

201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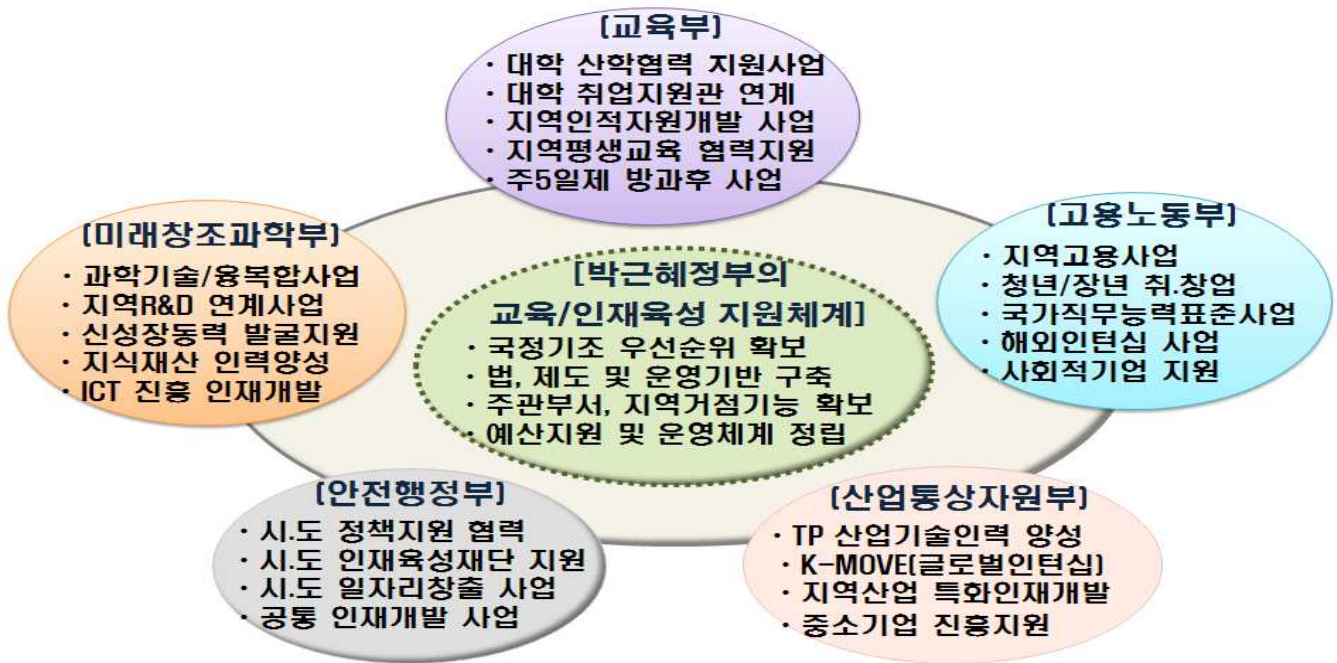
새정부 국정과제 연계 충남도정 교육분야 과제 발굴 연구

연구책임 최병학 박사
(선임연구위원)

새정부 국정과제 연계 충남도정 교육분야 과제발굴 연구

2013. 4. 15 / 최병학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정부의 교육관련업무 구조변화 (잠정)



- ①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 대학 산학협력, 특성화·마이스터고 기능 존치
→ 대학 산학협력, 평생교육 및 취업 관련 지역인적자원개발 강화 제기
- ② 「미래창조과학부」(신설) : 국가R&D 주도,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지식재산 전략, ICT·정보통신·디지털 콘텐츠 진흥 등
→ ‘창조경제’ 기반 산업특화 신성장동력 발굴, R&D 지원·협력 활성화
- ③ 「고용노동부」 : 지역고용사업, 청년 취·창업 및 해외인턴십, 사회적기업 지원
→ 청년실업 해소, 베이비부머 세대 재취업, ODA 연계 해외취업 촉진
- ④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청 기능강화, 중견기업·지역특화 발전 촉진, 국제통상기능 신설 해외시장 개척
→ 테크노파크 산업기술인력, 지역중소기업 및 국제통상 인력양성 활성화
- 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등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관련기능 변화 관련
→ 지역단위 현장수요 기반의 인재양성 및 활용기반 활성화 추진 예상

□ 새정부의 「창조경제」와 지방정부 교육발전의 연계성 검토

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은 지방정부 차원 교육발전과 긴밀한 관련

→ 이를 위해서는 국정~도정~시·군정 간 수직적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청~각급 기관·단체 등과 연계·협력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 요청

「창조경제」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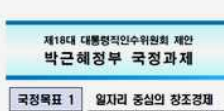
-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비전인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국정목표로 제시
 - 세계 최고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과 함께 성장동력이 멈춰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제시



창조경제론
(2012. 10)



대선공약집
(2012. 12)



국정과제
(2013. 2)



취임사
(2013. 2. 25)



2013년 경제정책방향
(2013. 3. 28)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하여 산업 융합 추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시장,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핵심가치를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으로 제시하고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이끌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② 교육부의 정책비전인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 이를 위하여 ①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②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③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의 세 가지 목표로 설정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의 기반구축 관련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과 관련,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학교의 교육과정과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을 현장수요에 맞게 개선
- 고교 직업교육 강화와 관련, 마이스터고는 국가 및 지역 전략 산업계와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선정·지원,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
- 전문대학 집중 육성과 관련, 고령화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에 유연하게 맞춰 발전 하도록 전문대학 제도를 정비 및 일부 전문대학은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으로 전환, 성인중심 비학위 교육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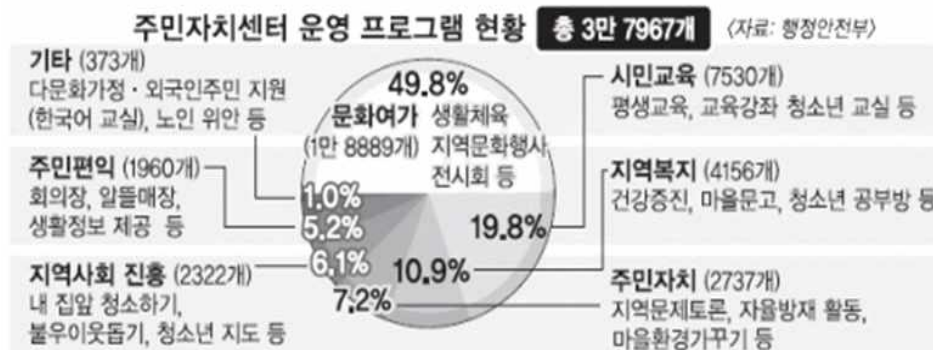
- 지방대학 지원 확대와 관련, 수도권 집중과 대학 입학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방대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 「(가칭)지방대학육성법」 제정을 추진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와 관련, 각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평생교육 종합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15년부터 제공하고, 소외지역의 주민들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지원센터를 '13년에는 16개 기초자치단체에 시범 설치 및 '16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할 계획

□ 새정부 국정기조·조직변화 관련 충남의 교육분야 사업·시책발굴(안)

① (제안 1) 충청남도 주민자치센터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극 도입」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작은 평생학습기관」 도지사 지정 추진

※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요리교실, 노래교실, 헬스, 에어로빅 등 문화·여가·오락 일색으로 ‘자치’라는 이름이 무색할 상황

〈전국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1)



- 충청도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의 수는 주민자치 132개, 문화여가 880개, 지역복지 121개, 주민편익 35개, 시민교육 147개, 지역사회진흥 70개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문화·여가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 취·창업 지원 등 실용적인 직업능력 개발교육, 사회자본 확충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적극 보완이 필요

1) 2012년 1월 기준으로 전국 주민자치센터에 개설된 프로그램은 3만 7,967개이며, 주민자치 관련 프로그램은 2,737개(7.2%)에 불과했으며, 이는 3년 전 7.3%(2,428개)보다 비중이 더 낮아졌음. 제주도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비중이 33.6%(496개)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0.2%(2개)로 가장 낮았음.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1만 8,889개(49.8%)로 절반을 차지함. 시민교육 프로그램 7,530개(19.8%), 지역복지 프로그램 4,156개(10.9%),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 2,322개(6.1%) 등으로 나타났음. 경북은 70.5%(296개)로 문화·여가 프로그램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서울신문」(2012. 3. 30), 11면 참조.

〈전국 대비 충남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수〉

2012. 1 현재기준

구분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기타
계	37,967	2,737	18,889	4,156	1,960	7,530	2,322	373
경기	9,823	348	5,124	920	424	2,443	435	129
경북	420	20	296	39	9	46	9	1
충북	1,111	97	701	119	20	129	40	5
충남	1,385	132	880	121	35	147	70	0

* 자료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2011). 내부자료.

- 충청남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은 2010년~2012년 평균비율을 분석해 보면 주민자치 4.5%, 지역복지 9.5%, 주민편익 2.7%, 시민교육 12.4%, 지역사회 진흥 2.5%, 기타 0.1%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여가프로그램은 68.3%로 나타나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남
- 또한 충청남도 주민자치센터 문화·여가프로그램 비중이 63.5%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여가 비중은 49.8%에 비해, 아주 높은 비율을 나타냄(2012년도 기준)

〈충남 주민자치센터의 연도별 프로그램 현황: 2010~2012〉

(단위: 프로그램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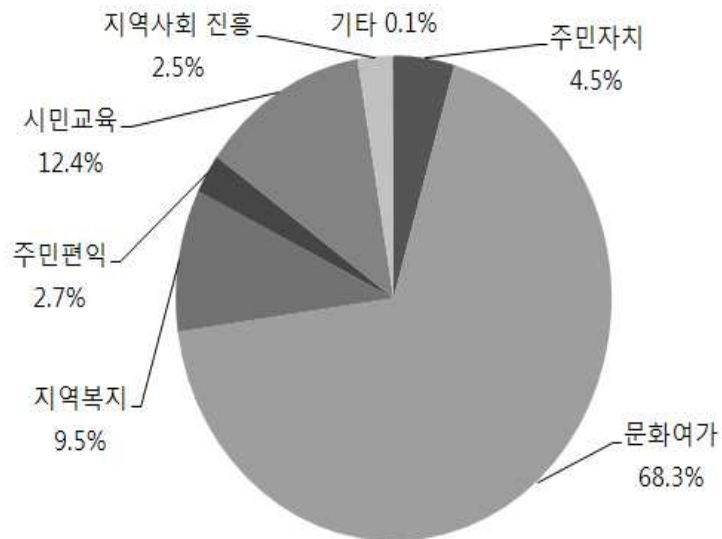
연도	구분	프로그램 수	주민 자치	문화 여가	지역 복지	주민 편익	시민 교육	지역 사회 진흥	기타
2010	합계	841	25	548	114	40	98	14	2
	비율	100	3.0	65.2	13.6	4.8	11.7	1.7	0.2
2011	합계	931	9	709	58	7	139	8	1
	비율	100	1.0	76.2	6.2	0.8	14.9	0.9	0.1
2012	합계	1,385	132	880	121	35	147	70	0
	비율	100	9.5	63.5	8.7	2.5	10.6	5.1	0.0
2010~2012 평균			4.5	68.3	9.5	2.7	12.4	2.5	0.1

(프로그램 유형 구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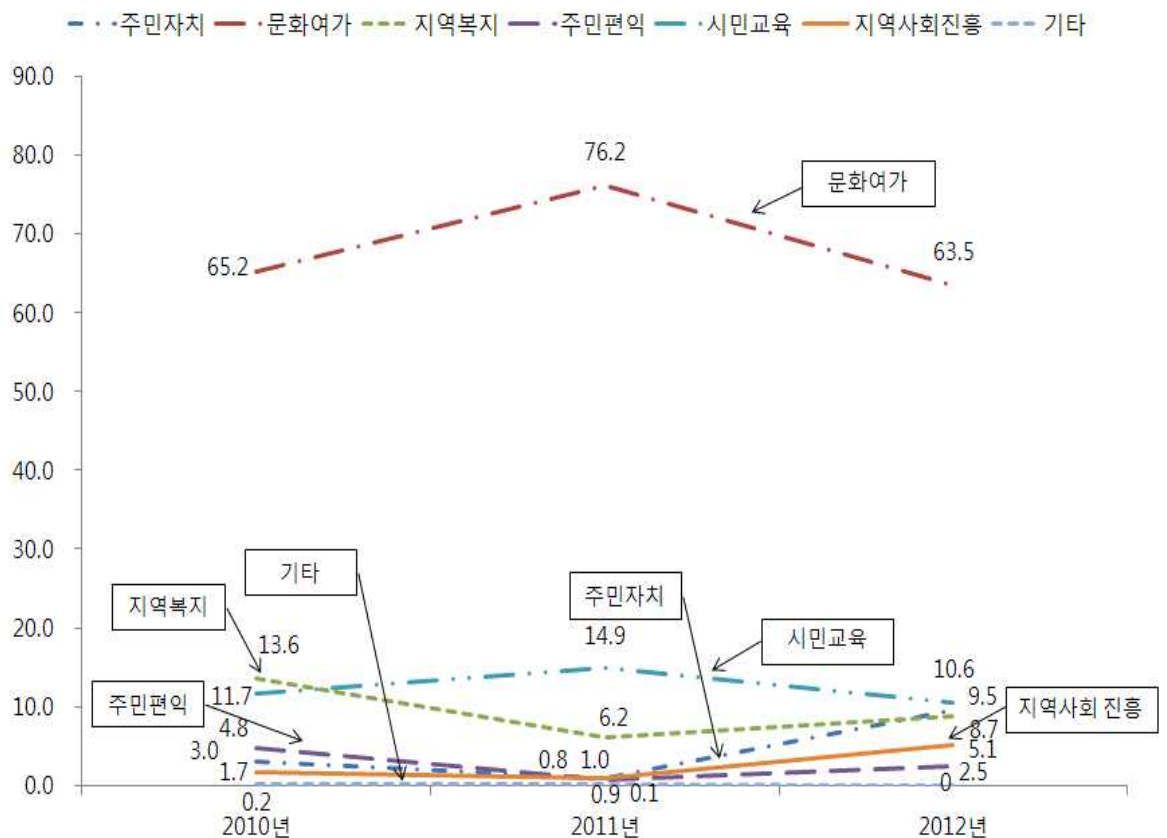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바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 문화여가: 지역문화행사 추진, 전시회,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 지역복지: 건강증진, 마을문고, 경로, 탁아, 어린이공부방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편익: 회의장 제공, 알뜰매장 운영, 생활정보제공 등 ● 시민교육: 평생학습, 교양강좌, 외국어교실 운영 등 ● 지역사회진흥: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
|---|--|

- 이를 충청남도 주민자치센터의 연도별 프로그램의 유형별 평균비율과 추세변화(2010~2012)를 보면, 2011년도 문화·여가프로그램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충남 주민자치센터의 연도별 프로그램의 유형별 평균비율: 2010~2012〉



〈충남 주민자치센터의 연도별 프로그램의 유형별 추세변화: 2010~2012〉



[참 고]

- 충남 금산군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문화여가 비중은 2010년 68.8%, 2011년 65.7%, 2012년 64.2%, 2013년 67.6%로 다른 프로그램 유형에 비하여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 전체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비중은 63.5%이며, 전국의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여가 비중은 49.8%로, 금산군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비중은 전무한 상태(2012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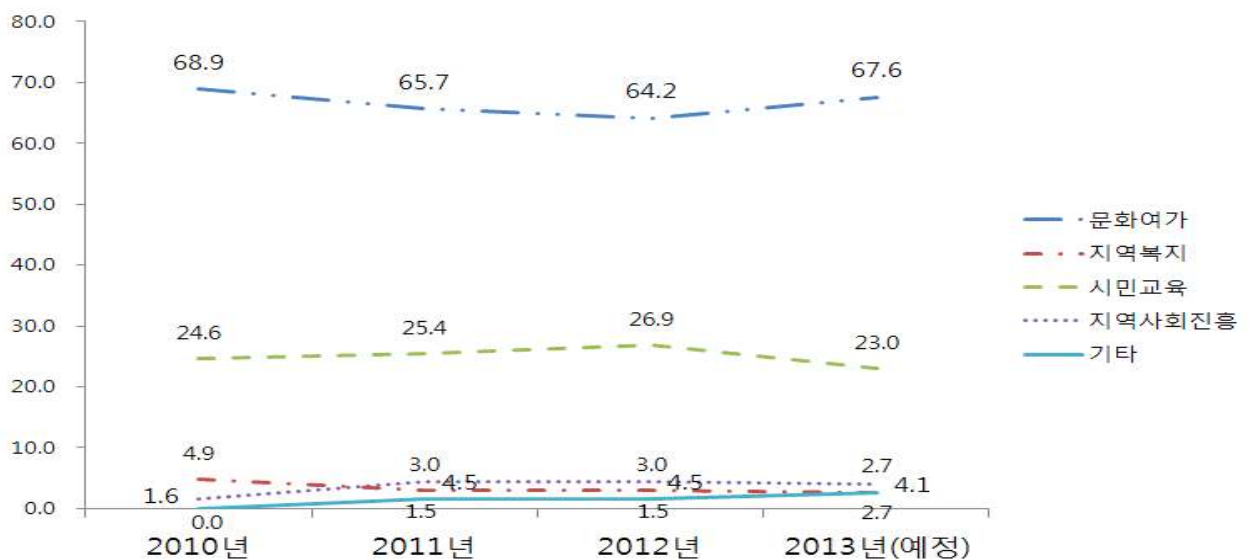
〈충남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연도별 운영 프로그램 현황: 2010~2013〉

(단위: 프로그램 수, %)

구분			주민 자치	문화·여가 (생활체육, 취미교실 등)	지역복지 (건강증진, 어린 이공부방 등)	주민 편익	시민교육 (평생학습, 교양강좌, 외 국어교실 등)	지역사회 진흥 (청소년 지도 등)	기타
2010	합계	61	-	42.0	3.0	-	15.0	1.0	-
	비율	100	0.0	68.9	4.9	0.0	24.6	1.6	0.0
2011	합계	67	-	44.0	2.0	-	17.0	3.0	1.0
	비율	100	0.0	65.7	3.0	0.0	25.4	4.5	1.5
2012	합계	67	-	43.0	2.0	-	18.0	3.0	1.0
	비율	100	0.0	64.2	3.0	0.0	26.9	4.5	1.5
2013 (진행 중)	합계	74	-	50.0	2.0	-	17.0	3.0	2.0
	비율	100	0.0	67.6	2.7	0.0	23.0	4.1	2.7

- 금산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한 2010~2012년과 진행중인 2013년을 종합하여 추세변화로 분석해 보면,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단연 압도적

〈충남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연도별 프로그램 추세변화: 2010~2013〉



○ 참고로 전국 시·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²⁾

〈전국 시·도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 개, 천원, 천명)

구분		전체	평균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대전	경기
계	프로그램수	11,059	1,580	1,717	4,915	48	1,042	114	2,971	252
	예산	38,448,300	5,492,614	13,173,867	327,528	235,000	19,106,655	1,393,250	1,876,000	2,336,000
	참여자	64	9	358	392	1,074	889	28,778	28	33,686
학력보완	프로그램수	854	122	12	258		10	5	567	2
	예산	2,765,000	395,000	63,000	30,000		2,302,000	110,000	170,000	90,000
	참여자	34	5	8	38		16	0	2	0
성인기초 문자해독	프로그램수	103	15	13	37	1	16		30	6
	예산	2,801,737	400,248	1,269,407	48,000	4,000	1,140,330		40,000	300,000
	참여자	876	125	9	1	15	4		0	5

구분		전체	평균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대전	경기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수	3,839	548	627	2,867	27	145	55	90	28
	예산	13,899,866	1,985,695	9,412,683	50,000	149,000	2,570,483	684,200	83,500	950,000
	참여자	611	87	20	171	616	63	2	1	3
인문교양	프로그램수	1,735	248	497	74	8	332	7	811	6
	예산	6,189,515	884,216	331,093	94,528	29,000	4,487,894	327,000	374,000	546,000
	참여자	611	87	10	3	174	405	3	5	11
문화예술	프로그램수	2,410	344	360	73	8	476	4	1,429	60
	예산	8,865,612	1,266,516	730,917	45,000	36,000	6,856,505	15,690	981,500	200,000
	참여자	591	84	21	8	172	361	0	15	14

※ 따라서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자치활동기능 강화 및 자격증 취득, 취·창업 지원 등 실용적인 직능개발교육, 사회자본 확충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적극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적용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발굴·시행과 함께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작은 평생학습기관」으로 도지사 지정 등 별도의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2)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다모아정보망 구축 '12년 사업 종합성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1. 23. 18-19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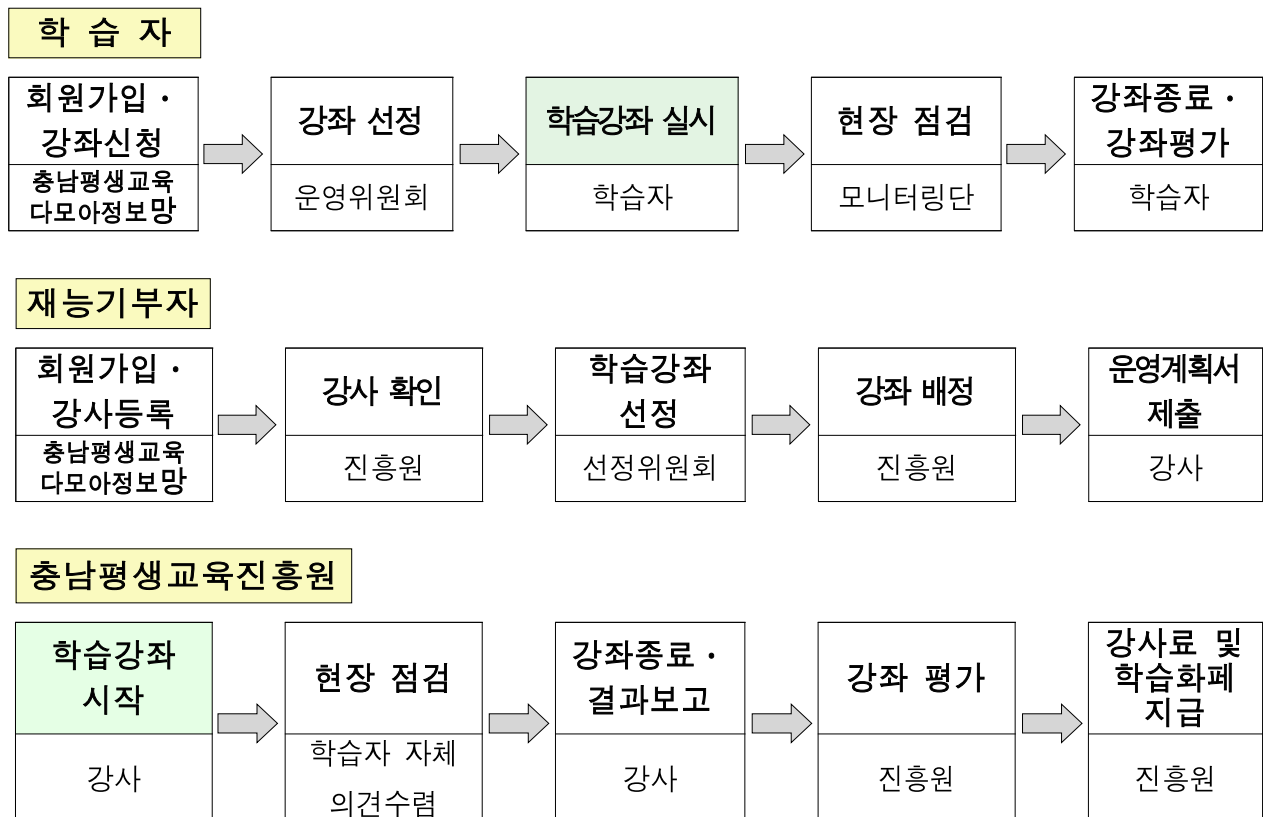
② (제안 2) 「(가칭) 충남 평생교육 재능봉사단」 운영

※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재능기부 및 재능봉사와 관련, 충남도민의 평생 교육 참여율 증진을 통한 행복도 제고, 전문 유휴인력의 재능환원 및 사회경제활동을 통한 경쟁력 제고, 봉사와 학습을 매개로 한 소통과 통합의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

〈충남 평생교육 재능봉사단의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사업목표	추진방향
충남도민 평생교육 참여 확대	⇒ 교육 소외층 발굴을 위한 홍보마케팅
	⇒ 도민의 지속적 평생교육 참여 관리
	⇒ 전도민의 참여를 통한 학습문화 조성
인적자원 최대 활용 지역 경쟁력 제고	⇒ 개인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능환원 추진
	⇒ 학습-일-삶의 질 제고의 선순환적 기반 구축
소통과 통합의 사회적 자본 형성	⇒ 재능기부단 커뮤니티 조성
	⇒ 지역사회 자발적 학습역량 실천 강화

〈충남 평생교육 재능봉사단의 운영흐름도〉



○ 기관별 운영기준을 예시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학습자 : 신청자격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충남도민(단체 포함) 및 교육소외계층, 학습대상은 성인,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수강료는 무료(재료비는 학습자 부담), 신청제한은 1인이 2개 강좌 동시신청 불가, 학교교육 관련 강좌 및 동일 강좌에 대해 신청 불가, 준수사항으로 운영규정 위반시 1년 범위내에서 신청을 제한
- 재능기부 참여자(강사) : 강사자격은 해당분야 종사자로 1년 이상의 강의경력자, 전문직 종사자로 6개월 이상 강의경력자, 단 경력인정기준은 주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강의한 경우 인정, 강사료는 기본 1회(2시간 이내) 약 2만원 정도, 준수사항으로는 강의진행시 강사증 패용 필수적, 진흥원 실시 직무연수 및 워크숍 참여, 운영규정 위반시 2년 등록 제한 등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강사 및 강좌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강사모집 및 활용은 강의계획, 경력, 자격, 봉사활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강좌 및 강사선정 및 인원, 지역요건 등을 고려하여 배정, 강좌 선정·지원은 구성인원수,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효과 등을 고려후 선정, 교육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배정(타 공공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운영 불가), 현장점검은 모니터링단 활용을 통해 수시 방문 점검, 강좌폐강은 전체 인원 중 출석률 70% 이하의 경우

○ 교육시간과 관련, 학습자 1인당 연 2개 강좌, 1개 강좌당 최대 4시간, 1주 2시간 허용 (1인 학습자 최대 8시간 학습 참여), 교육 소외계층은 1인당 연 4강좌, 1강좌당 최대 4시간, 1주 2시간 허용 및 교육장소는 공공시설물, 직장,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충남 지역 일대로 하되, 교육재능기부자의 사설근무지, 개인교습소에서는 활동을 금지 등 명문화 조치 필요

○ 특히, 「충남평생교육재능기부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주요역할은 강사 및 강좌선정 기준 마련, 서비스 강좌 선정, 지속화를 위한 방안모색 등이며,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다음과 같은 활동기반 마련이 기대

- 「충남평생교육재능기부단」의 구성 및 출범
- 홍보마케팅 실시로 재능기부자 상시 모집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 품격 운영을 위한 재능기부자 역량 강화
- 참여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학습자 모니터링 실시 등

③ (제안 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및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관련, 충남도내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중심 직업교육의 기회제공으로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체계를 강화하고, 고졸 재직자의 학위취득 및 경력개발 인프라를 구축
 - 직업교육의 기회 확대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입학시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 등을 중점 반영한 선발 제도를 확대, 취업희망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위탁 확대·다양화 추진 등
 - 고졸 취업자의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고졸 취업자 등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위 취득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직자 대상 국비 해외유학 프로그램 신설 추진
 - 성인근로자 중심 학사운영 개선(학점교육, 유연학기제 등), 재직경력의 학점 인정, 후진학 장학금 지원 등
-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평생 직업교육 기능 및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
 - 특성화 100개교 추진 관련, 전문대학이 산업기술인력, 서비스산업인력 등 산업 분야별 핵심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학과별 특성화 유도
 -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추진과 관련, 전문대학 학제의 유연성 확대 및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 강화 기능다변화 도모
 -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육성과 관련, 전문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가칭)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하여 평생학습 핵심기관으로 육성, 지원
 - 창업보육, 자격취득 지원,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 제공 등 비학위 과정을 중심으로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국내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산업체에 취업하는 GHC(Global Hub College)사업 확대
 - 전문대학생 해외연수 사업의 경우 해외취업과 연계성 제고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출처: 교육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교육부, 2013. 3. 28, 보도자료)

-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방거점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진학·취업·정주 등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포함
 - ‘지방거점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충남에서 선정된 지방대학이 지역산업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금년 6월중 마련 예정 및 ‘(가칭)지방대학육성법’ 제정 추진 관련,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유치 및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 지역인재의 공직 입직·공공기관 채용우대정책의 지속 추진 등 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지방대학의 특성화, 지방거점대학의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진학·취업·정주 등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을 포함
 -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방대학마다 강점 있는 학부·학과를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명문학과로 특성 있게 발전하도록 지원
 - ‘지방거점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방대학이 지역산업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제안 4) 충남인재육성재단 내 「(가칭)미래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운영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지역인재육성 추진구조 변동내역을 정부부처별로 예시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교육부(구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산학협력, 특성화·마이스터고 기능을 중점 수행하며, 앞으로 대학 산학협력, 평생교육 및 취업 관련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및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미래창조과학부(신설)는 국가R&D 주도,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지식재산전략, ICT·정보통신·디지털 콘텐츠 진흥 등에 역점을 두면서 ‘창조경제’ 기반의 산업특화형 신성장동력 발굴, R&D 지원·협력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
 -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사업, 청년 취·창업 및 해외인턴십, 사회적 기업의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청년실업 해소, 베이비부머 세대 재취업, ODA 연계 해외취업 추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청 기능강화, 중견기업·지역특화발전 촉진, 국제통상기능 신설 해외시장 개척 등을 중심으로 테크노파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지역중소기업 및 국제통상 인력양성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등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관련기능 변화와 관련, 지역단위 현장수요 기반의 인재양성 및 활용기반의 활성화 추진이 예상
- 새정부의 지역인재육성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립 중점과제의 설정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시적으로 검토는 다음과 같음
 - 교육부는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직정비, 예산지원, 운영체계 재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2002~2007), 지역인재육성사업(2008~2011) 사업추진 후 종료되었으나,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인재육성 전담부서 신설 및 시·도 대상 RHRD 운영체계 조기 정상화 추진이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설 관련 시·도(광역)대상 지역거점기관의 지정·운영이 필수적인 바, 이는 기존 지역RHRD센터를 적극 활용, ‘미래창조형 인재육성’을 목표로 산학협력 및 R&D 지원강화를 위해 지역거점기관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
 -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업해소, 산업인력 고용촉진, 해외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및 취·창업 지원사업의 중앙주도적 단기성과형 운영방식의 탈피, 지역주도적 현장수요기반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으로 전환, 특히 세계한인무역협회 연계 ‘K-MOVE’(해외한인기업 인턴십사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

- 안전행정부는 자치분권 및 시·도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인재육성 정책지원·협력을 강화하고, 전국 시·도별로 인재육성재단(장학회 포함)에 대한 정책지원·협력체계의 활성화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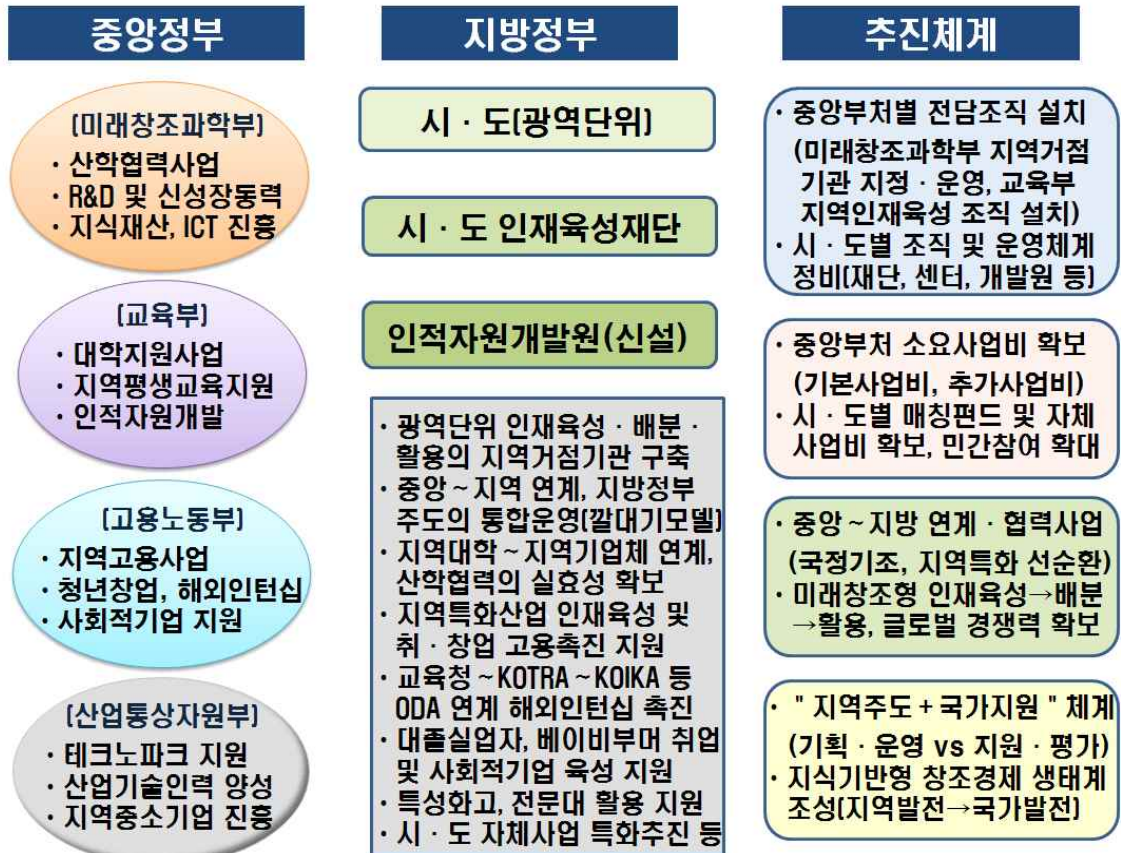
○ 이와 관련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새정부의 지역인재육성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립 중점 과제의 설정과 관련한 지방정부 차원의 예시적으로 검토는 다음과 같음

- 시·도는 지역인재육성 관련 조직정비, 예산확보, 운영체계 재정비를 적극 추진하며, 2011년 이후 지역인재육성 국비지원 중단으로 대부분 전담조직, 예산지원, 운영체계 부실·와해 및 일부지역의 자체사업으로 현상유지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감안하여, 조속히 지역주도적인 미래창조 인재육성·활용을 위한 전반적 운영체계 재구축을 과감히 추진이 필요
- 시·도 인재육성재단(장학회 포함)은 장학회의 재단전환과 관련한 창조적 역할 부여가 긴요하며, 현재는 지역인재육성 허브기능 수행 역부족 상태이므로 21C 지식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 종합기능 수행기관으로 자리매김이 긴요
- 현 시·도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대부분 연구원 소속으로 역할·기능이 미미한 수준에 있으며, 지난 국비지원 중단 이후 일부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를 제외하고 명맥유지 상태에 있으므로, 정상적 운영기반 마련으로 조기에 기능전환이 절실(부산인적자원개발원 별도)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2011년 이후 진흥원으로 전환, 지역평생교육 중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직제상 총괄조직(부/팀) 내 RHRD 기능부여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이 최소화 상태에 있는 만큼, 앞으로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고용 연계사업 병행 추진이 필요

○ 특히 충남인재육성재단 내의 「사무국」·「대외협력실」 조직체제로는 국내·외 장학사업, 기숙사(학사)관리, 재단기금운영 및 사무관리 등의 업무로 최소화되어 있어, 새정부의 지방대학(전문대학 포함) 특성화 추진 및 취·창업 연계 지원, 직업능력개발교육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구축·적용 및 직무능력평가제 도입·운용, K-MOVE(글로벌 인턴십, 해외취업), 맞춤형 인재육성·취업연계 도제(徒弟)제도(Apprenticeship) 도입, 베이비붐 세대 취·창업 지원 등 시대적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인재육성재단 내 「미래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운영이 필요

- ‘미래창조형 인재’의 육성→배분→활용의 지역거점기관(RHRD Hub Center)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원/센터”설치·운영은 새정부 국정기조 구현의 핵심 정책수단의 역할 기대

〈정부조직 개편 관련 지역인재육성 추진구도: 예시〉



- 아울러 글로벌 해외인턴십 사업의 정례화 추진 및 운영체제 재정립, 해외인턴십 파견 국가의 다양화 유도, 해외인턴십 관리시스템 구축, 해외인턴십 참여기관 및 기업체의 신규발굴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 해외인턴십 사후관리체제 및 자체평가모델 구축이 긴요하며, 앞으로 지역단위 현장수요 기반의 인재양성 및 활용기반의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평생교육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
 - 특히, 가장 실용적인 진화모델로 알려진 맞춤형 인재육성·취업연계 도제(徒弟)제도 (Apprenticeship System)의 본격 도입 및 추진, 사회공헌형 베이비붐 세대의 취·창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
 - 이는 지역의 대졸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을 긴밀히 연계 하는 새로운 형태·방식의 ‘교육+고용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방정부와 대학과 기업이 상호협력하여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육성된 인재가 지역 기업에서 우선 배분 및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시스템의 구축을 의미

⑤ (제안 5) 미래창조 지향의 「(가칭)충남교육협력포럼」 구성·운영방안

- 현재 광역지자체와 광역교육청은 일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화되어 학교내 정규교육은 교육감이, 학교밖 인재육성·평생교육·산학협력 등은 시·도지사 관할, 「충청남도교육발전협의회」(공동위원장 행정부지사·부교육감) 및 「충청남도평생교육협의회」(의장 도지사, 부의장 부교육감)로 구성, 기관간·관할간·역할/기능간 조정이 어렵고, 광범위한 협력체제 구축에 한계를 노정
- 따라서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미래창조 지향의 「(가칭)충남교육협력포럼」을 각계 각층의 인사들로 구성,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광역단위에서 발생·제기되는 각종 교육협력현안들에 대한 다자간 협의체로 폭넓은 조율·조정, 협력증진·갈등해소에 선제적 대응효과를 충분히 기대, 이와 관련한 자체 지원조례 제정, 운영기준·절차의 마련, 실무지원을 위한 충남인재육성재단 내에 「포럼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이 기대